주간 규제 정보

Vol. 278

2020. 01. 13 ~ 2020. 01. 19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 3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2. 獨 섬유인증 'Gruener Knopf'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다 ····· 5
3. 中 라오닝성 식품라벨 등록 및 통관 대리 서비스 이용법 ····· 8
4. 터키 무역부,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재조사 개시 ····· 13

1381 인증표준콜센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하여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내용>

□ 중점관리품목 운영 강화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하여,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 (`18년 10.8% → `19년 6.5%)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0개를 ‘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 (사례) 유모차 부적합률 : (`17) 0%(조사19/리콜0) → (`18) 0%(29/0) → (`19) 23.5%(17/4)

□ 안전성조사 확대(<정기> `19년 4회 → `20년 5회, <수시> 연중 상시)

(정기조사) 그간의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하여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다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와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여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수시조사) 또한, 제품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 사회적 이슈제품을 연중 수시 조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하는 한편, 최근, 위해성 검증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대행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잠재적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 리콜제품 후속관리 강화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위해제품 회수율을 제고한다.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편,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제품안전기본법」이 '20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뿐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품안전기본법」개정안 제27조제2항제4의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유통시장 감시 확대·강화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철저히 실시한다.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위해상품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약17만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약 200명)을 위촉,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는 한편,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 단속(년 2회이상)을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표원은 안전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17일에 개최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공개본)"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사전 공개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동 계획에 따라, 현재도 봄철·신학기에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20년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월 중순에 발표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2. 獨 섬유인증 'Gruener Knopf'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다

- 섬유업계 내 '지속가능한 패션' 트렌드 부각 -
- 섬유산업 및 제조업계 내 사회적 공정가치 및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에 일조 기대 -
- 독일 및 유럽 섬유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도 관심 기울여야 -

□ 새로운 지속가능 섬유인증 'Gruener Knopf(그뤼너 크노프, 녹색 단추)' 도입

○ 2019년 9월 지속가능 섬유인증 'Gruener Knopf(그뤼너 크노프 녹색단추)' 도입
- 독일은 2019년 9월 지속가능 섬유인증 'Gruener Knopf'을 새롭게 도입함. 이는 자발적인 임의 인증이며, 섬유 관련 모든 참가자 및기업에 표준으로 적용되는 인증임.

'Der Gruener Knopf' 인증마크



자료: gruener-knopf.de

○ (도입 배경) 이는 2014년 결성된 섬유 관련 업계 내 상호 교류를 위한 플랫폼인 '지속가능한 직물을 위한 연합(Buendnis fuer nachhaltige Textilien)'에서 출발함. 여기에는 총 120개 회원기업이 가입해 기업별 또는 공동의 활동을 이어옴.

○ (도입 목적) 이는 공정하게 생산된 섬유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으로 도입 목적은 소비자를 위해 공정하게 생산된 섬유 제품을 보급하는 데 있음.
· 독일 경제협력 개발부(BMZ)에 따르면 소비자의 3/4은 지속가능한 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임금으로 16시간 교대로 봉제하거나 독성 화학물질로 염색한 티셔츠를 입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함.
- 최근 2020년 1월 7~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가정용 섬유직물전시회(Heimtextil) 기간에 개최된 미래 포럼(The Future Forum)에서 이 인증을 소개한 독일 경제협력 개발부(BMZ)의 'Der Gruener Knopf' 기업지원 담당 쉬트(Mr. Niels Schuett)에 따르면 이 인증은 국가 인증으로 의식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류를 구입할 수 있는데 핵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섬유직물을 구분 가능하다고 전함. 따라서 이는 투명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발급되는 '소비자를 위한 인증'이라고 밝힘.

○ (인증 적용분야) 이는 패션의류나 가정용 직물류 등의 여러 상품에 적용되는데 주요 인증분야는 봉제, 재단, 염색, 표백 등의 영역임.

□ 주요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 취득 현황

○ 총부가가치 사슬에서의 '사람과 환경' 보호가 궁극적 지향점
- 'Gruener Knopf' 인증은 국가가 정한 46개의 노동권 보호 및 환경보호의 기준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가치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준수한 제품임을 보증함.
- 여기에는 크게 기업과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업에 20개, 제품에 26개의 표준이 적용됨.
- 기업은 20개의 기준에 근거해 인권, 사회적, 생태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과 섬유부문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함.
-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사회 및 생태 표준이 적용되는데 독일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지급(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초과시간수당 지급 등),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수축 준수, 차별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환경 표준과 관련해서는 오염물질 방출 및 잔여물, 화학물질 사용과 환경영향 등이 평가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가소제, 중금속 및 기타 위험 화학물질 금지와 생산 중에 발생하는 폐수의 한계수치 등이 포함됨.
- 사회적 기준은 제품의 제조 영역과 환경적 기준은 염색, 표백 등 섬유 가공과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최저 기준 준수가 핵심임.
- 이 인증은 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품목 단위로 인증돼 3년간 유효하며, 기타 다른 인증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
- 'Gruener Knopf' 인증은 총 부가가치 사슬, 즉 목화밭에서 봉제나 표백 및 염색 등의 제조단계 및 옷걸이에 이르기까지 사회 및 생태적 기준 준수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해야 함.

· 관련 인증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www.gruener-knopf.de) 참조

○ 인증 도입 초기단계 - 3단계 절차
- 해당 인증 절차상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도입 단계가 있음. 이는 특히 독일 인증서비스(DAkkS) 및 시험기관의 인증절차에 따라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사용됨.
- (인증 절차) 이 도입단계에서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됨. 전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됨.
- ① (신청) 해당 'Gruener Knopf' 인증 관할 사무소에 양식 없이 신청서 송부, 관할 사무소는 신청자격 심사, 기업에 준비를 위한 자문 제공

· 인증관할 기관 주소 및 메일:
Geschäftsstelle Grüner Knopf
Potsdamer Platz 10, 10785 Berlin, Deutschland
E-Mail : info@gruener-knopf.de

- ②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한 1차 평가) 인증 관할 사무소는 기업에 제3의 시험기관 중개, 해당 기업은 시험기관과 시험계약 체결, 시험기관의 심사 진행
- ③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심사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기업은 인증 관할 사무소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라이선스 계약기간 동안 기업은 테스트된 제품에 'Gruener Knopf' 인증 표시 가능
- (인증 비용) 인증 도입 단계에서 인증 관할기관은 초기 테스트(시범 인증)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컨설팅 서비스도 포함됨. 비용 부담은 기업과 시험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일부임.
- 시범 인증 후 발생하는 비용(적합성 확인, 재 인증 및 경우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 등)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현재 30개의 기업이 인증 취득
-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쉬트(Mr. Niels Schuett)에 따르면 현재 많은 우수기업이 이에 동참하고 있음. 최신 집계에 따르면 총 30개의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 외에도 100여 개의 기업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함.

- 이미 알려진 지속가능성 추진 선도기업과 Hugo Boss, Otto-Group 등의 대기업 외에도 Socks4Fun 등의 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눈에 띔.
  · Alma &Lovis, Aldi Nord, Aldi Sued, Brands Fashion, CharLe, Derbe, Dibella, Engel, Feuervogl, Hans Natur, hessnatur, Hopp, Kaufland, Kaya&Kato, Lidl, Manomama, Melawear, Millitomm, Modespitze Plauen, Phyne, Posseimo, Rewe Group, Schweickardt Moden, Tchibo, Trigema, Vaude, 3 Freunde.
- 연방경제협력·개발부에 따르면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협회 설비업체나 종합병원 (세탁물) 설비업체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함.

'Der Gruener Knopf' 인증 취득기업



자료: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공식 발표 자료 및 최신 포럼 발표 자료

ㅇ 인증 시행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의 표현
- 이러한 새로운 인증 도입은 섬유업계에서 공공연히 이슈가 되는 저임금 국가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섬유가공제품의 전 생산 공정에 걸쳐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이행하는 데 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특히 2000년 이래 EU에서도 부각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인증의 기준으로 삼아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보수'라는 원칙 하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차후 의식 있는 독일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인증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됨.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의 쉬트는 현재 해당 인증은 도입단계라 할 수 있는 'Gruener Knopf 1.0'에서 미래 비전인 'Gruener Knopf 2.0'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에 있다고 전함. 향후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 부가가치사슬 단계로 확장, QR 코드 도입을 통한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더 나아가 재활용 능력, 기후 저해성 등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함.
- 더 나아가 쉬트에 따르면 향후 이 인증은 추가로 다른 단계로 확장될 예정이며, 이 인증이 EU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함.
- 이어진 인터뷰에서 쉬트는 또 하나의 인증 도입이 업계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는 업계의 반응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증을 통해 사회적 공정 가치 및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업계 내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낙관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9년 9월 도입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Gruener Knopf(녹색 단추)' 인증은 상당히 많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취득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섬유 산업계를 위시해 전반적으로 제조업계 내에서 사회적 공정 가치 및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이는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공정 노동 분업의 현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실천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ㅇ 인증 도입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는 독일 및 유럽 시장 내 섬유직물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 인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이미 독일 내 다수의 섬유업계 및 유통기업이 인증 취득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 인증이 국내 기업의 대독일 납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내 기업 역시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차후 해당 인증은 '사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의 이미지 구축과 동시에 소비자의 신임을 얻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자료: gruener-knopf.de,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 가정용 섬유직물전시회 Heimtextil 현장 방문, 동 기관 인증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2020-01-13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3. 中 랴오닝성 식품라벨 등록 및 통관 대리 서비스 이용법

- 수입·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 가능 -
- 품질인증 및 라벨 등록 등 중국 현지 규정 준수를 통해 관리당국의 감독·관리 대비 필요 -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중심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를 수입하는 현지 진출기업 또는 수입대리상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지 인증, 통관 지원기관인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중국 검험인증그룹(中国检验认证集团,CCIC) 소개

ㅇ 중국검험인증그룹(中国检验认证集团, CCIC)
- 중국검험인증그룹(中国检验认证集团,CCIC)은 1980년 중국 국무원 비준을 얻어 설립된 국영 시험인증기관으로 중국 및 해외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룹 내 직원 수는 약 2만 명이며, 100개 이상 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기업정보 조회 사이트 톈옌차(天眼查)에 따르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기관서비스센터(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机关服务中心)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기관서비스센터(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机关服务中心)가 중국 검험인증그룹의 지분을 각각 25%, 20%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입상품 검험연구소(中国进出口商品检验研究所) 등 11개 기관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음.
- 2007년부터 식품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 품질 인증기관인 중국 질량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CQC) 업무도 함께 수행함.
- 2004년 중국 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를 설립해 한국에서도 각종 시험접수 외에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과 기타 자율인증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중국 검험인증그룹 업무 소개



자료: 중국 검험인증그룹 홈페이지

○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中国检验认证集团辽宁有限公司)

- 1993년 설립된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中国检验认证集团辽宁有限公司)는 랴오닝성 해관을 통해 수입하는 기업의 시험·인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 검험인증그룹(中国检验认证集团)과 랴오닝성 출입경검험검역국서비스센터(辽宁出入境检验检疫局机关服务中心)가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의 지분을 각각 51%, 49% 나눠가지고 있음.
- 다롄 보세구(大连保税区), 잉커우(营口), 단둥(丹东), 진저우(锦州) 등에서 랴오닝성 주요 해관 입주건물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www.ccic.com 또는 www.ccicln.com)를 통해 주요 시험·인증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및 전화(86-411-82637710) 상담도 가능함.

○ 주요 고객

-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 둥펑(董峰) 영업부 총경리는 랴오닝성 소재 식품 수입기업이 주로 찾는다고 소개함.
- 중국 전역 또는 지역 내 수입권한을 가진 대리상이나 전문 무역기업이 찾아오기 때문에 수출기업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주요 한국 고객으로는 유제품·어린이 간식 등 식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N사와 T사가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요청으로 제품 라벨 등록 및 통관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 및 특징

- 주요 서비스로 수입기업 및 수입상품 등록, 국가표준에 따른 라벨 제작 후 등록, 통관 대리 등이 있음.
-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의 서비스는 일반 통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해관 담당 부서와 직접 접촉해 문제가 무엇인지 즉시 파악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해관 통관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는 지역별 해관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아가 문제를 빠르게 찾아내 해결할 수 있음.

○ 서비스 비용

- 상품 라벨 등록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며 상품검사 대리, 통관 대리, 식품 영양성분 검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는 수입자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라벨 등록 시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음.

- 상품 라벨 합격증은 최초 비용을 지불한 후 수입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함.

제공 서비스 및 비용

서비스	비용(위안)
상품검사 대리	500/1회
통관 대리	500/1회
상품검사	200/1회
수입자(상) 등록	500/1회
영양성분 검사	450/1건
1~10종 식품군 라벨(등록) 합격증	500/1개
10~50종 식품군 라벨(등록) 합격증	400/1개
영유아 식품 라벨(등록) 합격증	3,000/1개

자료: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

□ 기타 시험인증기관

○ 에스지에스표준기술서비스(通标标准技术服务有限公司, SGS-CSTC Standards Technical Services)

- 에스지에스표준기술서비스(通标标准技术服务有限公司)는 1991년 에스지에스그룹(SGS Group)이 중국 표준과학기술그룹유한공사(中国标准科技集团有限公司)와 함께 설립한 시험인증기관으로 홍콩 에스지에스(香港通用检测认证有限公司)와 중국 표준과학기술그룹유한공사가 각각 85%,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1878년 곡물검사소로 시험·검사 비즈니스를 시작한 에스지에스그룹(SGS Group)은 현재 전 세계 2600개가 넘는 사무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재부품 및 전기전자 등 품목의 국가별 품질 검사, 국제표준, 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www.sgsgroup.com.cn)를 통해 주요 시험·인증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및 전화(86-(0)10-53153974) 상담도 가능함.

○ 씨티아이인증그룹(华测检测认证集团股份有限公司, Centre Testing International)

- 2003년 선전(深圳)에 설립된 민영 시험·검사기관으로 환경, 전자제품, 소비재 등 시험·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 홈페이지(www.cti-cert.com)를 통해 측량, 성분검사 등 주요 시험·인증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및 전화(86-755-33683666) 상담도 가능함.

□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Export Voucher)

- 중소기업은 개별 수요에 맞게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 및 품질검사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해 사업기간 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음.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해외규격인증 서비스



자료: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현지화지원사업

-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 전문가와 연계해 현지어 라벨 샘플 제작 및 등록, 영양성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홈페이지(global.at.or.kr)에서 현지화지원사업을 신청하면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전문기관과 연결된 후 라벨 제작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자료: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시사점

○ 시장 감독·관리 강화에 따른 규정 준수 필요

- 중국 정부는 수입·통관 편리화 정책과 함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음.
- 정상적인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거나 성능 또는 품질이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리 당국의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 식품 라벨 등록, 통관 상담 서비스 이용
- 랴오닝성 소재 해관을 통해 수입·통관을 준비하는 기업은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를 통해 식품 라벨 등록 및 통관절차에 관한 상담도 가능함.
- 랴오닝성 내 식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중국 수입 대리상은 중국 검험인증그룹 랴오닝유한공사를 통해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음.

자료: 중국검험인증그룹(中国检验认证集团, CCIC), 톈옌차(天眼查), 중국검험인증그룹랴오닝유한공사(中国检验认证集团辽宁有限公司) 인터뷰 등

2020-01-14 심영화 중국 다롄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81 인증표준콜센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 터키 무역부,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재조사 개시

- 한국 포함한 아시아 5개국 원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재조사 시행 결정 -
- 관련업체는 2월 9일까지 이의제기 통해 예외조치 신청 가능 -

□ **대상 HS Code 및 품목명**

○ HS Code 5407(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재조사 시행 배경**

○ 터키 정부는 2006년 6월, 대한민국, 중국을 비롯한 5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HS Code 5407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 총 8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시행 중
-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 대한민국, 그리스, 대만,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중국, 태국, 필리핀

○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된 반덤핑 규제는 현지업체의 재조사 요청에 의해 두 차례 연장 시행 된 이후 2020.1.20 종료 예정이었으나, 터키 업체가 재조사를 요구하여 터키 정부는 반덤핑 재조사 개시를 발표함(2020.1.4 관보).

○ 터키업체들은 반덤핑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국 원산 제품으로 인해 터키 내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규제 연장과 추가 관세 상향 조정을 위한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터키업체들에 따르면, 조사 대상 품목인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자국업체가 터키시장 내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동일한 생산방식과 품질을 보유한 수입산 제품들이 터키 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

□ **품목 설명**

○ HS Code 5407 제품은 합성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루어진 실을 이용해 직조한 우븐(woven) 원단으로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대부분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임. 동 제품은 양복자켓,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음.

○ 해당 제품의 기본 수입 관세는 8%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GSP 국가에 대해서는 6.4%, 한국 등 FTA 체결국 원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수입 관세 면제 중

HS Code 5407 제품의 터키 내 기본 수입 관세율 (단위: %)

HS Code	관세율				
	EU 국가	FTA 체결국 (대한민국 등)	말레이시아	GSP 국가	기타 국가
5407	0	0	2.7	6.4	8

* 터키-말레이시아 FTA 체결 후 기본 수입 관세 점진적 철폐 중
자료: Tariff-tr

○ 터키정부는 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기본 관세를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m^2당 110g을 초과

하는 경우와 이하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한편, 이의제기를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 적용된 반덤핑 기본 관세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임. 우리기업들 중 일부는 110g/m^2 초과-14.64 CIF %, 110g/m^2 이하-4.39 CIF %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별 반덤핑 기본 관세 부과율 (단위: CIF %)

국가명	110g/m^2 초과	110g/m^2 이하
대한민국	40	12
그리스	70.44	21.13
대만	30.98	9.25
말레이시아	15.93	4.78
불가리아	70.44	21.13
중국	70.44	21.13
태국	30.93	9.28
필리핀	70.44	21.13

자료: Tariff-tr

□ **터키 내 합성필라멘트사(HS Code 5407) 직물 수입 동향**

○ HS 5407 품목의 전체 수입액은 2016년 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4억6천만 달러를 기록함.

HS Code 5407 제품의 2016-2018 터키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세계 수입액		429,786	100.00	446,050	100.00	461,731	100.00
1	대한민국	66,366	15.44	65,115	14.60	80,570	17.45
2	이집트	57,374	13.35	72,321	16.21	79,558	17.23
3	말레이시아	49,363	11.49	62,276	13.96	64,426	13.95
4	인도네시아	129,560	30.15	87,962	19.72	55,317	11.98
5	중국	29,951	6.97	36,315	8.14	43,785	9.48
6	그리스	11,234	2.61	17,758	3.98	22,070	4.78
7	이탈리아	12,219	2.84	13,105	2.94	20,188	4.37
8	베트남	11,545	2.69	13,715	3.07	17,965	3.89
9	독일	10,175	2.37	13,448	3.01	13,080	2.83
10	체코	8,344	1.94	10,509	2.36	10,784	2.34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06년 6월 최초 시행 후 2차에 걸쳐 연장되어 2020년 1월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터키정부는 터키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재조사 시행 결정

- 터키정부는 저가의 수입산 제품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터키 내 수입을 조절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수입산 제품들이 시장가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터키업계의 우려가 큼.

ㅇ (대응방안) 관련업체들은 해당 기간 내에 설문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가능하며, 터키 무역부는 2월 9일(발표일로부터 37일 이내)을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 바, 2월 9일까지 무역부에 질문지가 도착해야 함.

- 무역부는 제품의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 조사 대상국의 터키 내 대사관에 질문지 발송 예정, 받지 못한 업체 및 대사관은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터키 내 통상 전문 변호사는 반덤핑 조사 질문지 작성을 비롯한 이의제기 및 공청회 참석 등 사후 조치는 모두 터키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업체는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함.
- 이의제기 서류 및 변호사 선임 문의: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김우현 대리(woohyun@kotra.or.kr)

자료원: 터키 관보 30998호(2019/37, 2020.1.4), 터키 무역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2020-01-17 김우현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